



‘반값 등록금’ 추진의 선행조건

김태황

정치적 쟁점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대학교 등록금이 대학생 개인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6~7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그 영향으로 현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대학교가 등록금을 소폭 인상 또는 동결해 왔다. 그런데 올 5월 한나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어 ‘반값 등록금’ 추진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올 1월 민주당 내부 논의 과정에서 현실성 부족으로 유보되었던 이 사안이 역시 신임 대표가 출범집회를 방문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주장은 이제 정치적 쟁점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대학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대기업은 국가 예산으로 등록금을 지원해 줄 경우 몇 백억원에서 천억원에 이르는 지원금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양극화 해소의 방향과는 상반되는 사회적 현상을 야기시킬 수도 있겠다.

필자는 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된다. 취지에는 모두 공감할 만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전적으로 동감이다. 문제는 일률적인 인하 또는 ‘무상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

기에는 시기상조이고 실현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다. 취지를 살리면서 대안은 없는가 하는 점도 고민스럽다. 정치적 이슈에서 비롯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성급함과 군중의 감성적 이기주의가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견해는 예산 확보만 염려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상이다.

국가재정운용의 공정성

먼저 국가 재정 운용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무 중심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과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제 정착 단계로 진입하려는 마이스터고(高)의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 실업률이 높은 것은 일자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인력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대학교만이 미래 산업 역군을 양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장인(匠人)의 잠재력을 길러낼 만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과 기능 및 기술 인력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을 높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으로는 대학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해 대학의 글로벌

‘반값등록금’ 문제는 정치적 이슈에서 비롯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성급함과 군중의 감성적 이기주의가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강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경쟁력은 한참 뒤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교육 콘텐츠 수준의 미달, 교육 인프라(시설) 투자 부족, 교수진 부족 등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학교의 투자 확충을 촉구하곤 한다.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 투자 재원을 등록금 인하 재원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반값 등록금’ 논쟁은 본말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실현하기가 어렵다. 주어진 예산 지출 규모라면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 정치권이 대학생들에게 성급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촛불을 들도록 부추긴 일도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강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선행조건들

다행히도 예산 확보가 큰 무리없이 가능하다고 전제해 보자. 그래도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선행조건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첫째,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 이후 차기 또는 차차기 정권과 국회에서 그 파급영향이 발생할 것이므로 추진 주체가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국가 재정 부담이 확대될 것이

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당장은 연간 4~5조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지 몰라도 교육 분야에서만도 공정한 재정 지원의 목소리가 확산될 것은 뻔하다. 이를테면 사교육비 부담 완화의 요구는 어떠한가? 현재 영어와 수학 두 과목만 일반 학원에 다니는 일반 고등학생의 연간 교육비도 연간 1,000만원이다. 간단하게 계산해 보자. 고등학생의 분기별 등록비와 운영비는 45만원이니 연간 180만원이다. 서울 시내 일반 학원을 예로 들면 월 학원비는 과목당 평균 35만원 수준이다. 영어와 수학 두 과목이면 월 70만원이고 연간 840만원이다. 고등학생의 기본적인 순수 교육비만 이미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한다. 물론 사교육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학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일반화된 현실성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다.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라도 마련할 수 있다지만 고등학생은 학원비를 벌 수도 없다. 기초교육 투자 확대와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확대 등의 재정 수요도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반적인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의 일관성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두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다. 이에 따라 출산 장려와 기초교육 부담 해소, 고령층 인력 활용 증진, 고등교육의 민영화 등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 30년 전 고교 평준화 이후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불만은 잦은 변경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임을 상기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대학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률적으로 사립 대학교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지배력을 확대하기 보다는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별도의 국공립 대학교를 증설 또는 확장하여 지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지방 국공립 대학교의 집중 지원으로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여 저소득층이 양질의 교육을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교육 복지가 아니라 효율적인 교육 투자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대학교의 등록금도 무료이고 입학도 수월하지만 탈락률도 높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교와는 별개의 전공 영역별 그랑제콜(Grandes Ecoles)이라는 소수 정예 교육기관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대책이 획일적인 평준화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투자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대학교를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는 명분하에 숨겨둔 돈 보따리를 내 놓으라고 으박지르는 것은 대학교를 은연중에 부조리한 집단으로 인민재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라고 요구하면서 교육 및 연구 인프라 투자보다는 장학금에 우선 집중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대적인 감사(監査)를 통해 한 두 번은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지속될 수는 없다.

공정한 게임이라면, 상대방의 행동에 한 두 번은 무방비할 수 있어도 일방적인 게임 운영이 반복될 수는 없다.

다섯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는 100% 공감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교육비용보다 더 큰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만일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기 위해 연간 4조원의 예산을 지출한다면, 1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기타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 연봉 2,500만원의 일자리 16만개가 창출된다면 소득파급효과는 등록금 부담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권이 책임져야

무엇보다도 이번만큼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 정치권이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한번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오후 5시에도 빈둥거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일하도록 했더니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일꾼과 갈등이 빚어지는 역설적인 상황(마 20: 1-16)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상황이 다른 두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일깨워줄 수 있는 맞춤형(부분적이라 하더라도) 대책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 글은 「크리스천 CEO」 7월호에 게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김태황 파리제10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다.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자문위원, 국토해양부 규제개혁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